

## 大學教育의 문제와 改革과제

宋 柄 淳

(韓國教育研究所 理事長, 嶺南大 教育學科)

黃 仁 成

(韓國教育研究所 研究員)

### 1. 글을 시작하며

세계의 변화속도와 양상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속하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대학이 지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대학다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의 세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은 인적 물적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와 관련된 진리탐구와 창조적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대학이 대학답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학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세 가지 본질적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공공적, 사회적,

학문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대학이 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인재양성에 실패하고 있고, 사회적 책무성도 외면하고 있으며, 학문적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종건, 1992: 91). 그 이유는 한국 대학이 그 동안 너무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의 대학이 21세기라는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본래에 있어야 할 대학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개혁이 이전부터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학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질박함으로 다가서게 된 계기는 내적인 개혁의 요구보다는 외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UR)가 93년 12월에 타결되면서 시장개방에 대한 긴장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교육시장도 예외가 아니며, 대학시장이 개방될 때에

나타낼 수 있는 파고는 그 수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학 내부의 대비책은 전무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도 변화를 강구하는 내부의 요구에도 무감각했던 대학들이 이제는 자구책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교육시장개방에 따른 강제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국내 대학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되고 있어 대학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의 질이 낮은 대학들의 위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대학교육 개혁의 관점에서 UR의 성격과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학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원인을 대학교육의 정책적 측면과 대학 내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육 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격과 教育市場의 개방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8차 다자간 협상인 UR협상이 12월에 타결되었다. 이것은 자유경쟁에 의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법칙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UR협상의 타결 이후 세계경제질서는 국경 없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간의 경제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세계경제는 앞으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협력과 경쟁이 혼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은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지는 국가는 국가경제의 대외예속과 자국산업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UR은 21세기까지 적용될 국제무역규범이지만, UR협상의 타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미국과 유럽공동체(EC)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의

패권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의 후진국들은 이들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역경제블록의 형성이라는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세계 무역질서는 배타적 지역주의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교육시장의 개방은 UR협상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한미투자환경개선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에 이미 개방일정이 확정되었다. 우리나라가 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되면, 이 기구의 통상자유화 원칙 등에 따라 한미 쌍무협정에 의해 체결된 교육부문의 개방을 미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개방해야 하므로 그 효과는 UR협상의 결과와 같다.

교육시장 개방의 문제점은 개방성에 기초한 국제화의 논리와 경쟁에 의해 국내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하에 교육마저도 상품으로 취급하여 시장경쟁의 장에 등장시킨 데 있다. 외국의 교육기관이 한국의 교육시장에 매력을 갖는 이유는 높은 교육열에 비하여 턱없이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 있다. 그래서 외국의 교육기관이 거대자본과 우월한 교육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시장에 진출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예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또한 자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열등감으로 외국학위를 선호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외국계 대학이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뿌리내리기에 조건이 좋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육부가 밝힌 교육부문의 개방계획은 95년부터 전문학원(기술 및 예체능계)을 개방하고, 96년부터는 일반학원(어학 및 입시계)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부문(대학 이상)은 96년 이후에 개방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아일보, 1993. 12. 15). 대학이 개방되었을 때, 예측해 볼 수 있는 외국대학의 국내상륙 형태로는 분교, 예비과정, 대학원과정, 어학과정, 예체능계 예비학교 등이 현재까지로는 가장 유력하다(동아일보, 1993. 12. 15). 그러나 열악한 재정구조와 국제경쟁력이 미약한 교육계의 현실

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토대는 침식을 당할 것이고 지적 생산능력조차 외국에 의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게 된다.

교육시장 개방이 가져올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외국문화가 편파적으로 유입되어 우리의 정신이 잠식당하는 데 있다. 즉, 민족주체성이나 정체성을 상실하고 문화적 식민화로 인한 정신적 무국적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대학구조의 본질적인 변화와 질적 수준의 향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소수의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대학들의 존재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본질적이고 철저한 인식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가져야 한다.

### 3. 韓國 大學의 파행적 운영의 두 측면

대학교육이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에서 출발한다. 즉, 현재 한국의 대학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대학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킨 원인들을 분석해야만 대학교육 개혁의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대학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끈 요인들을 살펴본다. 한국 대학의 파행적 운영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학교육정책의 졸속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을 대학답게 가꾸기 위한 대학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점이다.

#### 1) 대학교육의 정책 변천과정

① 해방직후의 개방적 자유방임형의 대학정책  
일제 식민통치하의 폐쇄적 억압적 대학교육정책은 해방 직후 미군정하에서 개방적 자유방임의 교육정책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학정책은 자유방임에 가

까운 개방정책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많은 사립대학의 설립을 가져왔다.

#### ② 대학설치기준령

6·25 직후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정책의 지표로 ‘대학설치기준령’을 제정하였다. 이 기준령은 새로운 대학의 설치를 억제하고 기존의 대학에 대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령에 의한 대학교육정책은 대학의 수와 인구 억제 효과를 표면적으로 가져왔을 뿐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다(이형행, 1990 : 25).

#### ③ 대학정비안

5·16 직후 군사정권은 부실대학의 정리 및 대학발전을 강구한다는 미명 아래 대학정비안을 마련하여 양적 성장일로에 있던 한국 대학에 일대 개혁을 시도하였다.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양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학으로부터 학생선발권, 학위수여, 학생수의 증원과 감원 등에 대한 대학의 고유권한을 정부 당국으로 이양케 함으로써 획일적인 행정주도형의 대학과 당국의 권위구조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대학 학생정원령과 대학입학 예비고사

대학정비안은 대학정원의 증원을 원칙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이었으나, 정책추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대학정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1965년에 대학 학생정원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대학 학생정원령은 1969년에 실시된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되었다(강무섭, 1993 : 391). 대학 학생정원령과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실시는 대학의 고유권한인 학생정원 조정권과 학생선발권을 정부당국에 위임케 하는 규정을 보다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실험대학의 실시

유신을 단행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는 명분 아래 고등교육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혁안의 기본 방침은 고

등교육기관의 이념과 기능 확립, 발전적 대학에 대한 지원 및 부실대학에 대한 규제,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적 보완체제 확립, 산학협동체제 강화, 대학의 지역특성화 및 계열화 등이었다(윤정일 외, 1991 : 528). 실험대학은 표면적으로 대학의 자율성 증대와 통제의 완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생선발 등을 비롯하여 대학운영의 제도와 접근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당국이 각 대학에 실험대학 제도를 강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것 역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다.

#### ⑥ 7·30 교육개혁과 졸업정원제

7·30 교육개혁의 주요 내용 중 대학과 관련한 내용은 대학본고사 폐지와 고교내신성적의 반영, 전일제 수업의 실시, 교육대학의 수업연한 연장(2년에서 4년으로), 졸업정원제 실시 등이다. 이 중 졸업정원제는 당시 대학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학생수의 양적 증가를 가져와, 실로 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였다. 또한 졸업정원제는 대학의 분위기를 극단적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비교육적 측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 ⑦ 8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교육 관련정책

80년대 중반 이후 대학교육 관련정책은 85년 3월 7일부터 87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심의회'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교육개혁심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대학교육 개혁의 주요내용은 대학의 기능분화 및 특성화, 대학원중심 대학의 선별육성, 대학평가인정제도의 실시, 대학정원 정책의 자율화, 지역연구 및 지역연구 전문가 양성기능 강화 등이다(교육개혁심의회, 1987 : 117-133).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교육개혁안을 토대로 87년 이후 실시된 주요 정책은 대학자율화 정책, 대학평가인정제, 학원안정화 정책, 대학운영 발전정책, 입시제도 개선책 등이 있다(강무섭, 1992 : 33-36). 80년대 중반의 대학관련 정책은 대학자율화, 질 관리, 균형발전, 입시제도의 개혁을 기조로 삼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지만 성과를 찾기는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교육 관련정책들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을 지배해온 일련의 교육정책들은 관료주의적 통제형의 성격을 띠고서 자율적이고 자치정신에 입각한 대학발전을 지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대학교육 개혁정책들은 대학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존중하기보다는 당국의 지시·명령·통제하에 둠으로써 대학을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국의 대학통제는 합리화되고, 그 결과 대학은 당국의 지시에 부조건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

둘째, 대학정책 결정, 편법에 의한 대학의 파행적 운영, 관주도적 대학행정에 의한 대학통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문제, 특히 대학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얽히게 하였다. 즉, 대학이 관주도적 통제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학은 외적 환경변화에 민감해져 외부의 눈치나 살피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잃고 말았다.

셋째, 대학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대학교육 개혁정책들은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기에 급조되어 일회용 정책으로 계속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대학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학에 대한 당국의 간섭은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대학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데 요구되는 시설확충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미흡했다. 즉, 당국은 교육시설, 교육환경기준은 물론 학생정원, 학생선발, 학사행정, 교육과정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지침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지시·감독하였으나, 정작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에는 무관심했다. 대학에 대한 간섭은 강화하고 지원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통제적 방임정책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대학교육 개혁의 조치들은 외형적 조건 정비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상세히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연구·봉사와 같은 내적 기준에 대한 관심은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한 원인은 대학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총체적 이해 부족에 있다고 생각된다.

#### 2) 대학내적 요인

해방이후 계속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한 결과,

1992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32개교의 4년제 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이 중 사립대학은 97개교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약 109만 명인데 국립 대 사립 대학생수의 비율은 26 : 74로 전체 학생의 74%인 약 81만 명의 학생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 대학이 해방후 실로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룩한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사학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립대학의 설립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지 못한 고등교육정책을 민간 자본을 토대로 하여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갖추어야 할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난립된 많은 사학들로 말미암아 대학의 질 저하를 초래했는가 하면, 일부 사학 재단과 운영자들의 대학 사기업화에 의한 부실운영은 대학이 외부의 지시와 통제 아래 놓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한 대학내적 요인으로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열악한 교육여건과 대학운영의 파행성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부실한 교육여건의 측면을 살펴보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시설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이 빈약하다. 물리적 시설이 양적으로만 빈곤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준미달의 시설이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여건이 양적 질적으로 부실한 이유는 재정의 빈약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대학재정이 빈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원의 수도 부족하지만 대학예산의 절반이 인건비 등의 경상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시설, 교육기자재, 실험기구, 부족한 도서관 장서 등의 확충을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대학재정은 수익자 부담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 그래서 대학설립자는 국가이전 학교법인이전 간에 대학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재산과 시설을 갖추 뿐,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지출은 기본적으로 특경하게 선택된 수익자(학생 혹은 학부모)가 부

담해야 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왔다(김운태, 1993 : 418). 이것이 한국 대학 제정을 영세하게 한 가장 큰 이유이다. 다른 이유로는 대학의 설립자들은 대학투자에는 인식하고 대학을 기업으로 생각하여 이익만 쟁겼지 부실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학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육영기업가들의 부도덕한 처사는 대학교육의 발전을 저해한 근본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연초에 국민들을 경악과 분노로 몰아 넣은 전대미문의 부정입학 사건과 교수채용시 급품수수에 의한 부당임용, 각종 로비활동과 편법을 동원한 학생증원 등은 파행적 운영의 구체적 예이다.

부정과 비리, 그리고 편법으로 얼룩진 한국 대학의 현실은 대학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그래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거셀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대학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 4. 大學教育의 개혁과제

미래 한국사회의 비전을 대학에서 찾고자 한다면, 대학을 대학답게 건설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학교육정책으로 개편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 대학의 권위는 무너져 있고 그 도덕성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따라서 대학이 대학 본연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당국이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학생선발, 학생징원 조정, 학사행정 등 모든 권한을 대학에 되돌려주어 대학의 자율적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학문연구와 교육을 사명으로 하는 대학 사회는 자율적인 통제와 주체적 노력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개혁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시장이 개방되면 많은 대학들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대학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대응책과 대학별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교육기관과 경쟁할 수 있

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개혁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시급성을 전제로 하여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과제를 대학교육의 정상화에 근거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교육부 중심의 편의주의 교육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과 자치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의 수립에서도 신중을 기함과 동시에 신속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제정의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청된다. 현실적으로 높은 사학의존도를 감안할 때 정부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에서 20% 이상 지원의 폭을 높여야 하며, 사학 자체도 재단전입금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대학교육의 획일적 대중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특성있고 다양한 대학으로 발전되어 나갈 때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성 있고 다양한 대학발전은 각 대학이 나름대로 창학정신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실정과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려고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체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대학은 진리탐구의 학문공동체, 지식을 매개로 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도자 양성의 교육공동체, 민주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생활공동체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 5. 글을 맺으며

한국에서의 대학교육은 대중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트주의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수월성 측면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수월성의 추구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는 기여하는 바가 크겠지만, 한 개인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보기는 어렵다. 편향된 수월성의 추구는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여 이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고 인간성 구현과 사회정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UR협상이 7년을 끝먼서 타결된 현실점까지 철저히 국민들을 소외시켰다. 즉, 시장기방에 따른 대응책을 준비할 여건과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 UR의 세찬 파고를 넘기 위해서도 대학교육의 개혁은 필연적이다. 경쟁의 빙엄한 논리 앞에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한편으로는 그러나 대학 본연의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한국의 대학들은 이제까지의 서구지향적인 학문풍토에서 벗어나 민족교육의 학풍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에 근거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육내용을 개편함으로써 외국의 교육기관과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국민홍보와 공감대를 형성시켜 자국민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라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대학이 이제까지 기여한 공로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의 대학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미래적 전망을 가지려는 의지를 개혁을 통하여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 〈參考文獻〉

강우섭(1993), "한국고등교육 정책의 수월성 추구", 한국교육학회 교육행정연구회 편, 『교육행정의 발전과 전망』, 과학과 예술.

\_\_\_\_\_ (1992), "대학교육정책: 자율성과 안정화 추구", 『새교육』, 2월호, 한국교육신문사.

(111면에 계속)